재해 없는 안전한 환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혁신이 필요한 때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한 저력을 산업안전보건 혁신에 한 번 더 쏟아야 한다. 산업현장에 재해 없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 기업과 노동자가 일터에서 더욱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구정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노동자 삼키는 일터의 위험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감염성 질환이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코로나19는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과 우리 일상에 지금까지 경험한 바가 없는 전무후무한 큰 변화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눈부신 과학의 성취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선진국, 개도국 가릴 것 없이 퍼져나가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위생에 대한 개념,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식이 강해졌다. 코로나19를 통해 보았듯이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시대이다.

일상에서의 안전 못지않게 일터에서의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일터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막

을 수 있던 질병과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개인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먼저 추구하는 기업문화와 안전보건에 대한 낮은 인식, 낮은 예산 확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 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처벌이 약해 사고가 난 곳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대재해 줄이려면 법 사각지대 보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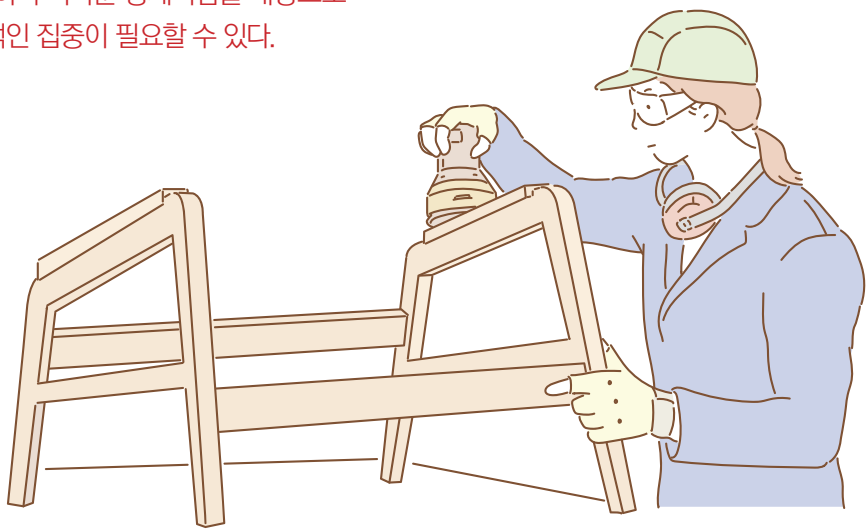
화력발전소 인명사고를 계기로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사업장에서의 가스 누출 및 질식 사망사고, 건설업·제조업에서의 추락과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계속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으며, 많은 논란 속에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얼마 전에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되는 등 앞으로 더 논의가 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일터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막을 수 있던
질병과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개인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먼저 추구하는 기업문화와 안전보건에 대한 낮은 인식,
낮은 예산 확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0명으로 하루 평균 사망자는 5.5명이고, 그중에서도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사고 사망자가 2.3명에 달할 정도로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유해위험 요인은 불균등하게 존재하여 소규모 사업장에는 유해위험 요인이 집중되어 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9년의 산재 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은 1.65로 전체 평균 1.08보다 1.5배 이상 높다. 또한 중대재해의 75%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게다가 작은 사업장에 위험을 관리할 능력과 자원이 없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와도 연결된다.
자력으로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재정·기술적 지원 등의 정책적인 집중이 필요할 수 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게다가 작은 사업장에 위험을 관리할 능력과 자원이 없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와도 연결된다. 자력으로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재정·기술적 지원 등의 정책적인 집중이 필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도 원하청 및 도급의 각 단계별 주체들에게 걸맞은 책임의 내용을 규정·부여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노사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노력 필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하는 위험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의무가 있다. 안전사고 및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향후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건설 현장, 폐수관 정비와 같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분야에서 로봇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산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인과 노동자의 예방적 노

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인은 안전 최우선의 인식을 가지고 노후설비를 교체하거나 안전장치를 보강하는 등 안전도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시설 및 현장 정기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과 기업문화의 조성도 병행해야 한다. 노동자는 작업 전·후 안전점검, 개인보호구 착용 등 안전보건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 산업현장의 주체들이 산업 활동의 필수 요소로 안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재해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실천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한 저력을 산업안전보건 혁신에 한 번 더 쏟아야 한다. 산업현장에 재해 없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 기업과 노동자가 일터에서 더욱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하는 위험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의무가 있다.
안전사고 및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